

【경찰학개론】 18'2

경찰채용 2차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01. 경찰의 부정부패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윌슨이 주장한 전체사회 가설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하다.
- ② 구조원인 가설에 따르면, 구조화된 조직적 부패는 서로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침묵의 규범'을 형성한다.
- ③ 전체사회 가설은 시민사회의 부패를 경찰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본다.
- ④ 썩은 사과 가설은 일부 부패경찰이 조직 전체를 부패로 몰들게 한다는 이론으로 부패의 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파악한다.

[정답] ④

[해설]

- ① 옳다.
- ② 옳다.
- ③ 옳다.
- ④ 틀림. 썩은 사과 가설은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으로 본다.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파악하는 가설은 니더호퍼, 로벅, 바커의 구조원인가설이다.

경찰 부패의 현상 및 원인		
가설	주장	내용
썩은 사과 가설	딘 애치슨	썩은 사과 한 개가 박스안의 사과를 모두 썩게 하듯 부정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관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유입되어 조직 전체를 부패로 몰들게 한다는 이론으로 부패를 개인적 결함으로 본다.
구조원인 가설	니더호퍼, 로벅, 바커	신참 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이론으로 부패를 조직의 원인으로 본다. 구조화된 조직적 부패는 침묵의 규범을 형성. 부패가 구조화된 조직에서는 법규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
전체사회 가설	윌슨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며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하다.

02. 다음은 한국 근·현대 경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부를 신설하고, 경무부의 장으로 경무

사를 두었다.

- ㉠ 미군정 시기에는 경찰이 담당하였던 위생사무가 위생국으로 이관되는 등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 ㉡ 구한말 일본이 한국의 경찰권을 강탈해 가는 과정은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한국 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 1953년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으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되었다.

- ① ㉠(O) ㉡(O) ㉢(O) ㉣(O) ② ㉠(X) ㉡(O) ㉢(O) ㉣(O)
- ③ ㉠(X) ㉡(O) ㉢(X) ㉣(O) ④ ㉠(O) ㉡(X) ㉢(O) ㉣(X)

[정답] ②

[해설]

- ㉠ x : 틀림.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하고, 경무청의 장으로 경무사를 두었다.
- ㉡ o : 옳다.
- ㉢ o : 옳다.
- ㉣ o : 옳다.

03. 「경찰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 ③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④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 ① 옳다. (경찰법 제1조)
- ② 옳다. (동법 제2조②)
- ③ 틀림.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동법 제11조②)

④ 옳다. (동법 제11조⑤)

04. 다음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감봉처분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 ㉤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③

[해설] 옳은 것은 ㉡㉢㉣ 이다.

- ㉠ 틀림.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경찰공무원법 제10조②) - 견책처분은 해당 없음.
- ㉡ 옳다. (동법 제6조②)
- ㉢ 옳다. (동법 제7조② 7호)
- ㉣ 틀림.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5조①)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동령 제5조②)
- ㉤ 옳다. (경찰공무원법 제6조① 단서)

05.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 ②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 ③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 ④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그 사유

를 고지하고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 ① 옳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8조③)
- ② 옳다. (동령 제12조③)
- ③ 옳다. (동령 제18조①)
- ④ 틀림.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령 제11조①)

06.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 기본강령과 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① 경찰사명: 경찰공무원은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긍지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임무수행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 ② 경찰정신: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 ③ 규율: 경찰공무원은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 ④ 책임: 경찰공무원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소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답] ④

[해설]

- ① 틀림. 단결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② 틀림. 경찰사명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③ 틀림. 성실·청렴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옳다.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다.

기본강령	
경찰사명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경찰정신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일상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호국·봉사·정의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
규율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
단결	경찰공무원은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긍지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임무

	수행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책임	경찰공무원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소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성실·청렴	경찰공무원은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0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8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④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해설]

- ① 틀림.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
- ② 틀림.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동법 제16조①)
- ③ 틀림.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동법 제15조①)
- ④ 옳다. (동법 제7조)

08.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직무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 ②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 ③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④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경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정답] ④

[해설]

- ① 옳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2의2)
② 옳다. (동법 제9조)
③ 옳다. (동법 제9조)
④ 틀림.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동법 제9조 ⑤)

09.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②

[해설]

- ① 옳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②)
② 틀림.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동법 시행령 제11조①) -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는 해당 없음.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동법 시행령 제11조②)
③ 옳다. (동법 시행령 제10조⑥)

④ 옳다. (동법 제11조의3⑥)

10. 다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값은?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일이 경과한 날부터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84 ② 90 ③ 94 ④ 100

[정답] ①

[해설] 총합은 84이다.

㉠ 20일 ㉡ 20일 ㉢ 30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①)

㉣ 7일 ㉤ 7일 (동법 제18조⑤)

11.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역경찰의 근무는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기타근무로 구분한다.
- ② 순찰팀의 수는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 ③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 ④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은 순찰팀장의 직무로 명시되어 있다.

[정답] ②

[해설]

① 옳다.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

② 틀림. 순찰팀의 수는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한다.(동규칙 제6조②)

③ 옳다. (동규칙 제6조③)

④ 옳다. (동규칙 제8조② 2호)

12. 다음의 「청소년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상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모두 고른 것은?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③

[해설] ㉢㉣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이다.

㉡㉣ 옳음. (청소년 보호법 제2조 5.호 가.목)

㉠㉢ 틀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과 비디오물소극장업은 고용은 금지되나 출입은 가능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이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5.호 나.목)

13. 다음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 단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주최자”가 될 수 없다.
-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 ㉣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②

[해설] ㉠㉢이 적절하다.

① 옳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② 틀림.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동법 제2조 3호)

③ 옳음. (동법 제16조②)

④ 틀림.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5조)-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은 제14조에 규정되어 해당 없음.

14.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용경력”이라 함은 총원에서 휴가·출장·교육·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 ② “정위치 근무”라 함은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정착근무”라 함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작전준비태세”라 함은 ‘경계강화’단계를 발령하기 이전에 별도의 경력을 동원하여 경찰작전부대의 출동태세 점검,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하며, 작전 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작전사항을 미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④

[해설]

- ① 옳음. (동규칙 제2조 7호)
- ② 옳음. (동규칙 제2조 3호)
- ③ 옳음. (동규칙 제2조 4호)
- ④ 틀림. 작전준비태세"라 함은 ‘경계강화’단계를 발령하기 이전에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경찰작전부대의 출동태세 점검,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하며, 작전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작전사항을 미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동규칙 제2조 9호)

경찰 비상업무 규칙 상 용어의 정의	
비상상황	대간첩·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수의 경력을 동원해야 할 치안수요가 발생하여 치안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때를 말한다.
지휘선상 위치 근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정위치 근무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정착근무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필수요원	전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이하 "경찰관 등"이라 한다)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일반요원	필수요원을 제외한 경찰관 등으로 비상소집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가용경력	총원에서 휴가·출장·교육·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소집관	비상근무발령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비상근무발령에 따른 비상소집을 지휘·감독하는 주무참모 또는 상황관리관(치안상황실장)을 말한다.
작전준비태세	'경계강화'단계를 발령하기 이전에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경찰작전부대의 출동태세 점검,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하며, 작전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작전사항을 미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15. 다음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각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부터 ㉣까지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p><제1종 보통운전면허> ㉠ 적재중량 ()톤 미만의 화물자동차</p> <p><제2종 보통운전면허> ㉡ 승차정원 ()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중량 ()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p>
--

- ① 10 - 12 - 4 - 3.5 ② 12 - 10 - 4 - 3.5
 ③ 12 - 10 - 4 - 4 ④ 12 - 10 - 3.5 - 4

[정답] ②

[해설]

㉠ 12 ㉡ 10 ㉢ 4 ㉣ 3.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8)

운전면허 종별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1종 보통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한정한다)- 삭제 <2018. 4. 25> 4.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6.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제2종 보통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5. 원동기장치자전거

1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각호에 규정된 12개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②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③ 제한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④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정답] ③

[해설]

- ①②④ 옳다.
- ③ 틀림.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암기] 음주 무면허 신 중 철길 앞 횡단 보도 어린 승객 적재 제한

8. 음주 약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음주)
7.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신호 지시위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중앙선 침범등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4. 앞지르기등 위반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9. 보도침범사고	보도(歩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2. 적재화물 추락사고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3. 제한속도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17.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원조사는 경찰청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 ② 공무원 임용 예정자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 ③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이나 「선원법」에 따른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 ④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 ① 틀림.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동규정 제33조②)
- ② 옳다. (동규정 제33조③ 1호)
- ③ 옳다. (동규정 제33조③ 3호)
- ④ 옳다. (동규정 제34조①)

18. 다음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보호대상자 중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더라도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없다.
-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신청을 한 사람 중 위장탈출 혐의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수 없다.
- ㉣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대책협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① ㉠㉡ ② ㉠㉢
- ③ ㉡㉣ ④ ㉢㉣

[정답] ④

[해설]

- ㉠ 틀림.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②)
- ㉡ 옳음. (동법 제7조①)
- ㉢ 틀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9조①)
- ㉣ 옳음. (동법 제4조의3)

19. 다음은 「범죄인인도법」상 인도심사명령청구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장관은 () 장관으로부터 「범죄인인도법」 제11조에 따른 인도청구서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검사로 하여금 ()에 범죄인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① 법무부 - 외교부 - 서울고등검찰청 - 서울고등법원
- ② 외교부 - 법무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방법원
- ③ 외교부 - 법무부 - 서울고등검찰청 - 서울고등법원
- ④ 법무부 - 외교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답] ①

[해설]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른 인도청구서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檢事長)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이하 "인도심사"라 한다)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범죄인 인도법 제12조①)

20. 수사구조개혁에 관한 주장 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이다. 나머지 셋과 입장이 다른 하나는?

- ① 대표적인 권력기관인 경찰과 검찰을 수직적 관계로 두면 국가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될 것이 우려되므로, 두 기관을 절연시켜 권한을 분산하여야 한다.
- ② 현행 수사구조 하에서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피의자에 대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의 편익이 저해되고 있다.
- ③ 수사와 공소제기는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검사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
- ④ 공소제기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 ① 검찰로의 권력집중에 대한 내용으로 독자적 수사권 부여에 대한 찬성론의 입장이다.
- ② 국민의 편익저해에 대한 내용으로 독자적 수사권 부여에 대한 찬성론의 입장이다.
- ③ 독자적 수사권 부여에 대한 반대론의 입장이다.
- ④ 독자적 수사권 부여에 대한 찬성론의 입장이다.